

2015년 국정감사 중견기업 관련 이슈 정리(I)

2015년도 국정감사가 한창 진행중입니다. 다양한 이슈와 쟁점으로 열기를 더해 가고 있습니다. 예년에 비해 중견기업의 경영환경 개선과 관련해서도 많은 문제제기와 대안 모색이 이루어졌습니다.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서 중견기업의 가치에 대한 공감대가 확대되었기 때문이겠지만 한편으로는 여전히 개선되지 못한 법·제도적 성장 걸림돌의 여실한 존재를 확인케 하는 현장이기도 했습니다. 상황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선제적 전략 수립의 시급성을 공유하기 위해 국회의원들의 발언을 중심으로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중견기업 관련 이슈를 정리했습니다. 중견기업은 다양한 창구를 통한 각계와의 소통을 통해 중견기업이 우리 경제의 건강한 산업생태계를 조성할 견실한 성장사다리이자 지속 가능한 성장을 견인할 글로벌 전문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1. 기획재정위원회 기획재정부 국정감사, 9월 14일

- 박맹우 새누리당 국회의원 발언 요지

(상속세 완화 필요성 강조) 연구결과에 따르면 세계 123개국 중 71개국에서 상속세가 없는 것으로, 상속세를 완화하거나 폐지하는 나라가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높은 상속세율은 창업자가 죽으면 대까지 끊기는 현상이 일어날 만큼 강소기업의 성장을 가로막고 있다. 정부는 가업상속공제 확대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길 바란다.

2.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중소기업청 국정감사, 9월 14일

- 이정현 새누리당 국회의원 발언 요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개선 촉구) 정부는 불합리한 규제를 통해 기업들이 성장을 자폐하는 피터팬 증후군을 유발하고 있다. 중소기업 제품만을 官에 납품토록 제한하는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제도’는 아스팔트콘크리트, 폴리에틸렌, 피복강관 등 수많은 제품에 적용되는 대표적인 사례다.

일례로 (강관 자체보다 부수적이랄 수 있는 피복을 기준으로 중소기업들만 참여할 수 있도록 제한된) 피복강관 시장의 경우, 중소기업들이 수익을 높이기 위해 저급의 외국산 강관을 수입해 사용하는 경우도 있어 국민 생활에 직결되는 상수도관의 품질 저하, 싱크홀 발생 등을 야기할 수도 있다.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는 순간 모든 혜택을 박탈당하는 중소기업은 중소기업으로 회귀를 피하거나 중소기업으로 위장하는 편법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 이러한 불합리를 해결할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할 때다.

3.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중소기업청 국정감사, 9월 14일

- 김상훈 · 이정현 · 홍지만 새누리당 국회의원 발언 요지 종합

(중견기업 지원 정책 합리화 촉구) 2013년 12월 ‘중견기업특별법’이 통과된 이후에도 관련 규제완화와 지원책 모색 등 실질적인 후속조치가 전혀 이루어지지 못해 중견기업 정책은 거의 방치된 상태다. 동일 법령 내에서도 중견기업을 대기업 또는 중소기업으로 일관성 없이 구분하는 조항들이 충돌하는 경우가 있을 정도다.

중견기업 진입 시 지원 대상에서 배제되는 제도가 82건(조세32건, 금융 9건, R&D 세액공제 18건 등)이며, 지원이 축소되는 제도 또한 28건에 달한다. 최근 5년 간 537개 중견기업 중 중소기업으로 회귀한 기업이 무려 328개를 기록했다. 중소-중견-대기업의 성장사다리가 무너지면 청년들에게 좋은 일자리를 제공할 기회는 요원하다. 중기청에만 맡겨두지 말고 국무총리실, 기재부, 미래부, 산업부 등 관련부처들이 적극 나서 범정부 차원의 종합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4. 산업통상자원위원회 한국전력공사 국정감사, 9월 18일

- 조경태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 발언 요지

(R&D 과제 성공률 제고 촉구) 우리나라의 지난해 R&D예산은 18조9,000억원으로 GDP대비 세계 1위이지만 평가와 인증, 실증이 전혀 연계돼 있지 않고 에너지 관련 R&D의 대부분이 특정 기관에 집중돼 있어 혁신적인 연구결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2010년부터 2014년까지 한국수력원자력과 삼성, 현대, 엘지, 두산, 한전 등 상위 30개 기관에 포함된 기업들에 집행된 에너지R&D 정책자금은 전체 에너지 R&D 지원금의 47.5%에 달한다. 에너지 공기업-대기업-연구소로 이어지는 예산구조가 ‘마피아’ 수준”으로 자금 여력이 충분한 대기업, 공공기관 보다 중소, 중견기업에 대한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